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8. 7.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 목 차 〉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HSBC 공익신고자 헤르베 팔치아니 스위스 본국 송환 위기](#) ... 1
- [광산 투자 관련 조사 결과 몽골 전 총리 2명 구속](#) 3
- [비클레이스 CEO 제스 스탈리, 공익신고자 관련 사건으로 벌금 부과 직면](#) 5
- [미얀마 반부패 노력 추진력 얻어](#) 8
- [대한민국-미얀마 반부패 협약 체결](#) 11
- [태국 군사정부, 불교 승려에 대한 부패 단속 재개](#) 13
- [베트남 부정부패 단속 강화로 고위 공직자 50명 징계 조치](#) 16
- [말레이시아 1MDB 스캔들 : 신입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 '나집 라작 전 총리 곧 구속될 것'](#) 18

II 국제회의 동향

- [2018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23
- [2018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24

III 옴부즈만 소식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옴부즈만, 정부에 소득·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전화 민원 서비스 개선 촉구](#) 25
- [체코: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사회보장 관련 민원 증가](#) 27
- [IOI: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개최](#) ... 29
- [영국 옴부즈관 조사 결과 암환자의 고통스러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 30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와 이제라바이잔 옴부즈만 사이 협력으로 비극적 사건 해결](#) ... 32
- [영국: 시 당국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인 가족 방치](#) ... 33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HSBC 공익신고자 헤르베 팔치아니 스위스 본국 송환 위기 (The Guardian, 2018.4.5)

- 스위스 HSBC 개인 은행의 범법 행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헤르베 팔치아니(Herve Falciani)가 이번 주 마드리드에서 체포되면서 스페인에서 스위스로 송환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IT 전문가인 팔치아니는 2008년 자금 세탁 및 탈세 목적으로 스위스 은행을 제도를 이용하던 130,000 기관 및 개인 목록을 가지고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도피했다. 이는 은행 역사 상 가장 큰 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 스위스는 2009년 팔치아니의 체포를 위한 국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프랑스 당국은 팔치아니의 본국 송환 및 유출 정보 환수 대신, 탈세범을 기소하는 데 이를 이용했다.
- 그 이후 팔치아니는 스페인으로 도피했고 2013년 스페인 법원은 은행의 기밀 정보가 중대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됐다면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스페인 법을 근거로 스위스의 팔치아니 본국 송환 요청을 거부했다.
- 스위스 법무부는 목요일 팔치아니의 본국 송환 공식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법원의 디에고 데 에게아(Diego de Egea) 판사는 본국 송환 건을 심리하는 와중에 팔치아니를 석방했다. 팔치아니는 여권을 돌려받았으며, 주 1회 경찰에 소재지를 보고해야 하고 스페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 팔치아니는 현재 5년 전 같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스페인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다. 5년 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2013년 이후로 팔치아니는 UN에서 지원하는 엄중 경호 프로그램의 보호 아래에 스페인에 거주했다. 2015년 11월 스위스 법원은 팔치아니에 대한

- 궤석재판에서 금융 스파이 행위와 정보 절도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스위스 당국은 현재 팔치아니의 본국 송환과 복역을 바라고 있다.
- 스페인 입장에서는 두 명의 카탈로니아 출신 도망자를 스위스로부터 송환받을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화좌파당의 마르타 로비라(Marta Rovira) 사무총장과 급진 민중연합후보당의 유명 의원 안나 가브리엘(Anna Gabriel)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망명 중이다.
 - 현재까지 스위스 당국은 스페인의 송환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팔치아니의 이번 체포를 스위스에 같은 대가를 기대하면서 행하는 일종의 협조 제스처로 보는 의견이 많다.
 - 로비라가 스위스로 망명하기 나흘 전인 3월 19일에 팔치아니의 체포 명령이 발부되었고, 이는 가브리엘이 스위스에 망명 신청을 한 지 수 주가 지난 후였다.
 - 팔치아니는 지난 수요일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진실을 말함으로써 영웅이 될 때’라는 제목의 강연을 시작하기 직전 체포되었다.
 - 많은 이들은 자신이 가진 기밀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대가 없이 프랑스, 스페인 및 기타 국가 당국과 공유한 팔치아니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다.
 - 아다 콜라우(Ada Colau) 바르셀로나 시장은 팔치아니의 체포와 본국 송환 위기를 스캔들이라고 칭했다.
 - 콜라우 시장은 ‘팔치아니는 스페인 당국과 협력하여 탈세 사건들의 기소를 도운, 반부패 노력의 중요 인물이다. 팔치아니는 또한 바르셀로나 시의회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언을 해 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 스페인 조세 당국은 팔치아니의 목록에 나온 인물 중 637명의 스페인인으로부터 체납 세금 3억 유로(2억6천2백만 파운드 상당)를 회수했다.

※ 원문기사 : HSBC whistleblower Herve Falciani facing extradition to Switzerland (The Guardian, Apr. 5, 2018)

광산 투자 관련 조사 결과 몽골 전 총리 2명 구속 (Financial Times, 2018.4.11)

- 몽골 반부패 당국이 오유 톨고이(Oyu Tolgoi) 구리광산 투자 관련 리오 틴토(Rio Tinto)사와의 주요 협상을 담당했던 두 명의 전 총리를 구속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광산 투자 사업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임한 산자긴 바야르(Sanjaagiin Bayar) 전 총리는 리오 틴토사가 캐나다 상장 개발회사 아이반호로부터 오유 톨고이 광산을 인수한 이후 초기 협상 단계에 참여했다. 2014년부터 2016년 재임한 치메드 사이한빌렉(Saikhanbileg Chimed) 전 총리는 더 큰 규모의 2차 비공개 협상을 담당했다.
- 지난 주 수요일 몽골 반부패 당국 발표에 따르면 두 전 총리는 현재 구속 상태이며 당국은 지난주에 조사를 위하여 미국에 머물고 있던 사이한빌렉 전 총리의 귀국을 요청했다.
- 두 명의 전 총리 모두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엄청난 규모의 오유 톨고이 광산 개발사업 진행 중 수년간 몽골 당국과 리오 사 간에 수많은 협상이 오고갔다. 그 과정에서 몽골 정부는 외국인의 광산 투자에 대한 정책을 재빠르게 변경하기도 했고 리오 사에 대하여 비용 초과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몽골 정부는 국가 재정 지출을 위하여 광산 개발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리오 사가 개발 비용 지출과 금융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만져보지 못할 것이다. 현재 리오 사에서 시중금리로 몽골 정부 몫의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몽골 내에서도 오유 톨고이 광산 수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직접 수익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정부는 관련 세금을 걷는 데에 만족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광산 개발 사업에서 노다지를 기대했던 정당들이 성급하게 여러 재정 지출 공약을 내세우면서, 원자재 시장 침체 지속으로 인한 몽골의 재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몽골 전 총리 2인이 구속되는 와중에 리오 틴토사는 아프리카 기니의 거대 철광석 광산 인수를 위하여 프랑스 컨설턴트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

※ 원문기사 : Mongolia arrests 2 former PMs linked to mining probe (Financial Times, Apr. 11, 2018)

바클레이스 CEO 제스 스텔리, 공익신고자 관련 사건으로 벌금 부과 직면
(The Guardian, 2018.4.20)

- 연간 390만 파운드의 연봉을 받는 바클레이스 CEO 제스 스텔리(Jes Staley)가 내부 공익신고자를 밝혀내려 한 시도에 대하여 문책 및 규제 당국의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CEO직을 계속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 2017년 한해에만 백만 파운드 이상의 보너스를 받은 스텔리에게 부과될 벌금의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문제의 내부고발 건은 바클레이스의 뉴욕 금융그룹 책임자로 고용된 팀 메인(Tim Main)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2016년 이사회로 발송된 서한과 관련되어 있다.
- 스텔리는 은행 내부 보안부서를 통하여 서한의 발신자를 찾아내려고 했다. 가디언지에서 확인한 이메일에서 스텔리는 서한의 발신인이 제이피 모건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던 동료인 팀 메인을 괴롭히고 중상모략했다고 비난했다.
- 바클레이스는 스텔리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국에서 스텔리의 청렴성에 대해서나 최고 경영자직의 수행 지속을 위한 적합성과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그러나, 규제 당국에서 주요 은행의 최고경영자를 조사하고 견책하는 일은 몹시 드물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금융규제원(PRA)은 공동 성명서에서 ‘영국 금융감독청과 금융규제원은 바클레이스와 바클레이스 은행 유한회사 CEO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CEO와 관련된 경고장의 초안을 발행했으며 사건이 종결되면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금융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2017년 4월 이후로 바클레이스를 휘감았던 안개가 일부 걷히게 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던 2017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200 포인트를 밀돌았던 바클레이스 주가는 금요일 오후 0.5% 상승하여 215 포인트를 기록했다.
- 두 개의 규제당국에서 발행한 경고장에 대하여 스텔리는 28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하지만 벌금 납부로 문제의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7년 스텔리는 투자자들에 대한 사과성명에서 ‘내가 실수를 했고, 공격을 받는 동료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다. 은행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 스텔리와 함께 조사의 대상이었던 바클레이스 은행은 양 규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징계 조치도 받지 않았다.
- 바클레이스 은행 측은 ‘그러나 바클레이스 은행 유한회사와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 유한회사 각각이 각자의 내부고발자 관련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양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은행 측은 또한 ‘바클레이스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금융 당국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클레이스는 또한 규제 당국에서 스텔리의 행동에 청렴성이 결여됐거나 최고경영자로서의 적합성 및 적합성이 결여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이제 스텔리는 28일 이내에 양 규제당국으로부터 받은 경고장에 대하여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규제 당국이 영국 금융가의 최고경영자를 조사하고 견책조치를 취하는 것은 몹시 드문 일이다.
- 바클레이스는 지난해 4월 스텔리 CEO와 은행이 해당 사건으로 FCA와 PRA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식시장에 공식 발표했다. 미국 뉴욕주의 금융서비스국에서도 스텔리의 행동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 스텔리는 이메일에서 ‘몇 년 전의 개인적인 일과 관련된 주장들과 그 모든 것들을 방송에서 떠드는 기자들의 의도는 내 생각에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스텔리는 바클레이스 은행이 리보금리 조작 및 기타 스캔들로 인한 위기로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고군분투하던 2015년 12월에 최고경영자가 되었다.
- 이번 주 규제당국의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이전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주주들이 걱정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 있을 연차총회에서 스텔리에 대한 찬성 표결을 제청했다.

- ISS사는 회사와 스텔리가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과 바클레이스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들어 스텔리의 유임을 지지하고 있다.
- 바클레이스는 2017년 4월 로펌 시몬스&시몬스에서 담당하던 내부 조사 결과 스텔리가 서한의 작성자를 밝혀내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직하지만 실수로’ 문제의 행동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바클레이스는 그러한 행동이 최고경영자의 공식 견책이나 상여금의 ‘상당한’ 삭감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 스텔리의 위법행위는 지난해 바클레이스 연차총회의 핵심 논의주제였으며, 스텔리의 연임에 대한 찬성표는 16%에 그치면서 스텔리에게 경고사격을 가했다. 스텔리가 회의장에서 주주들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4%가량이 기권했고 2.4%는 스텔리에 반대표를 던졌다.

※ 원문기사 : Barclays CEO Jes Staley faces fine over whistleblower incident(The Guardian, Apr. 20, 2018)

미얀마 반부패 노력 추진력 언어 (Voice of America, 2018.5.28)

-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고위공무원 및 해임된 장관에 대한 고발과 수사를 단행하면서 정부에서 공언한 부패 척결 노력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는 과거에 나약하고 무기력한 조직으로 비판받아 왔으나 최근 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동남아시아의 반부패 시류를 따라가고 있다.
- 미얀마 대통령실은 지난 5월 25일 쟈윈(Kyaw Win)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공식 확인했다.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쟈윈 전 장관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위원회는 또한 건설회사로부터 11,000 달러 이상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탄트(Than Htut) 식약청장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 아웅 치(Aung Kyi) 미얀마 부패방지위원장은 쟈윈 전 정관에 대한 조사의 현 단계에서는 ‘그가 어떠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5월 25일에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 미얀마 상원은 지난 주 부유한 공직자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반부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1월 개편된 위원회의 현재 권한으로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정치적 의지

-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는 과거 하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건만 조사했고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대해서는 대개 나서지 않았다. 마그웨 지방 주지사가 수백만 달러의 지역 개발자금을 유용한 부정부패 사건이 그 예로, 주지사는 지난해 유용 자금의 일부 반환 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 미얀마 투명성·책임성연합의 국내담당자 코이(Ko Ye)는 최근의 이러한 반부패 움직임에서 진정한 ‘정치적 의지’가 보인다고 하며 반부패 노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치적 의지라고 말했다.

- 미얀마에서 2012년 비준한 UN 반부패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 UN 마약범죄사무소의 마리 커쇼아 페지(Marie Cauchois Pegie) 자문관은 미얀마 반부패법 개정이 분명한 진일보였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비가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미얀마의 사법 체계가 강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경향이 짙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신고자는 맞고소 당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반부패법 개정안에서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자의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최대 형량을 5년에서 6개월로 낮추고자 했으나 상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문제의 형량이 최대 3년으로 낮춰지는 데에 그쳤다.
- 반부패법은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페지 자문관에 따르면 '그러한 조치의 실제 시행을 기대하기 힘들고' 미얀마의 증인 보호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호랑이 사냥

- 2016년 임명된 쯔윈 재정부 장관은 유명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이력서에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미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임기 동안 경기 악화와 기업-투자자 간 갈등 증가로 인하여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
- 윈 민트(Win Myint) 신임 미얀마 대통령은 3월 취임식에서 부정부패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한 바 있다. 신임 대통은 취임 후 첫 국정회의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게 유력인사들의 방해공작에 대하여 좀 더 대담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현 민족민주동맹 정부는 개혁이 늦춰지는 데 대한 전 국민적 비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미얀마 정치평론가 얀 미오 떼인(Yan Myo Thein)은 미얀마인의 일상 생활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는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표심을 얻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날파리만 쫓을 게 아니라 호랑이 사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러나 신임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2020년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가져다 주기에는 너무 늦었을 수 있다고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헌터 마스틴

(Hunter Marston) 연구원은 말한다. 미얀마 사법 시스템의 경직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마스톤 연구원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방의 빈곤 완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국가별 특색

- 동남아 지역은 1당 정치제 국가와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 군사독재 국가의 혼재로 인하여 각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목표와 접근방식을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
- 베트남에서는 2016년부터 지속된 부정부패 집중 단속의 결과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 위원 여럿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부정부패 사건 한 건에 수 십 명이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 캔버라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대학의 칼 테이어(Carl Thayer) 명예교수에 따르면 그러한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지난 10년간 주로 국영 대기업과 연관은 은행 관련하여 악화일로를 걷던 심각한 뇌물수수 문제가 일정 부분 진정된 성과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단속 강화의 주된 동력은 공산당의 국정 장악 시도였으며 여론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테이어 교수가 말했다. 테이어 교수는 또한 그러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에 대한 억압적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 미얀마에서 부정부패 관련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아웅 툰 (Aung Tun)은 그러한 전체주의적 접근방식 때문에 베트남의 반부패 노력을 적절한 모델이라 볼 수는 없으며, 부패방지위원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발한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 인도네시아를 미얀마가 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단속을 시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청렴한 정부를 이룩하는 데에 한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원문기사: Myanmar's Anti-Corruption Fight Gathers Steam (Voice of America, May. 28, 2018)

대한민국-미얀마 반부패 협약 체결 (The Myanmar Times, 2018.5.30)

- 미얀마와 대한민국 반부패 당국은 지난 수요일 협력 증진과 지식 공유, 부정부패 예방 및 근절을 목표로 전문성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미얀마 반부패위원회(MACC)의 우 아웅 치(U Aung Kyi) 위원장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세종시에서 협약에 서명했다.
- 협약 체결식에는 UNDP 서울정책센터의 발라즈 호르바트(Balazs Horvath) 소장, UNDP 미얀마사무소 크리스토포로스 폴리티스(Christophoros Politis) 수석기술자문, 미얀마 국회의 우 나이 미오 튄(U Nay Myo Tun) 의원과 우 아웅 떼인(U Aung Thane)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우 아웅 치 위원장은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의 국가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구조적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의 전문성을 배우고 미얀마의 부패 예방 역량을 향상시킬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양해각서 체결로 미얀마의 반부패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시했다.
- 박은정 위원장은 ‘오늘 양해각서 체결과 세미나를 기회로 한국의 반부패 경험 공유를 통해 미얀마의 부패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미얀마 공무원들은 이번 주 나흘간의 대한민국 방문 중 협약 체결식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 현지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다.
- 2006년에 도입된 부패영향평가는 공공행정 기능과 관련된 법안 및

규제안, 기존 법령에 내재한 부패 위험성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하여 공공행정 부패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의 의사결정권자와 기술 직원 및 입법 검토와 절차에 참여하는 미얀마 국회위원과 검찰청 대표, 감사원 대표 등에게 사례 연구와 정책 교육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질적 연습과제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 **원문**기사: Myanmar signs anti-corruption agreement with South Korea (The Myanmar Times, May. 30, 2018)

태국 군사정부, 불교 승려에 대한 부패 단속 재개 (The Guardian, 2018.6.25)

- 금욕의 삶을 맹세한 승려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종종 밝혀지면서 태국의 불교사원들은 오랫동안 탐욕과 부패, 성추문과 살인 및 아동 학대 등의 스캔들로 몸살을 알아왔다.
- 과거에 불교 승려들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졌으나, 지난 몇 달 간 태국 군사정부는 사찰의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갑자기 강화했고 그 과정에서 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승려 중 6명이 체포되었다. 7번째 승려는 프랑크푸르트로 도피하여 망명신청을 했고 태국 당국은 긴급추적권까지 발효해 가면서 유럽에서 그를 쫓고 있다.
- 태국 불교 승단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태국 군사정부가 대담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구속된 6명의 승려 중에는 태국 불교 최고 기구인 승가최고평의회 소속 노승들도 포함되어 있다. 방콕에 위치한 유명 불교사원 골든마운트템플의 고위 간부 두 명도 구속된 6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정치적 행동주의 및 프라우트 찬 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와의 유대로 유명한 우파 선동가 승려 프라 붓다 이사라(Phra Buddha Issara)의 구속이다. 이들 모두 여왕수호경비대 소속으로, 프라우트 총리는 이사라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 나레수안 대학교에서 태국 정치학을 강의하는 폴 챔버스(Paul Chambers)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군사정권에서 정권에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불교 승려들을 통제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승려들을 구속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군사정권은 국가 권력이 불교 승단의 질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14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태국 군사정부는 오랫동안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해 왔지만 이번 네 개의 불교 사원에 대한 기습 수사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라우트 총리 정권은 2019년 2월 총선 시행이라는 약속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강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불교 사원의 부패 척결은 프라웃 총리의 집권 세력이 정당으로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권자의 표심을 살 수 있는 손쉬운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 불교는 군주제, 국민(태국 국민의 90%가 불교신자)과 함께 태국의 3대 뿌리로 일컬어진다. 최근에는 불교 승려들이 사찰 내에서 저지르는 부정부패와 불법행위의 수위에 대한 혐오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태국 불교에서 신자들의 보시가 선업을 쌓는 행위로 적극 권장되기 때문에 불교 사원 몇몇은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보시를 받지만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외부 규제는 전무하다.
- 과거에도 군사정부에서 불교 사원에 대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시도해 왔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해 2월 태국 군사정부는 2,800만 파운드 규모의 보시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하여 유명한 불교사찰인 담마카야사원을 급습하여 주지인 프라 담마차요(Phra Dhammachayo)를 체포하려 한 바 있다.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잃은 후 군사정부와 원수지간인 탁신 시나와트라(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와 담마카야사원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담마카야사원에 대한 수사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담마차요는 체포를 피했고 3주 동안 4,000명의 병력이 배치된 기습수사에 대하여 지나치다는 의견이 널리 퍼졌다.
- 챔버스는 ‘담마카야사원의 포위작전 이후 태국 국민들은 군사정부가 승려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정부의 의도에 의혹을 품기 시작하면서 프라웃 총리의 지지율에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이번 체포는 군사정권의 인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사람들이 지난해 실패한 작전을 잊게 하기 위한 의도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붓다 이사라 이외에 체포된 승려들의 경우 이미 부정부패로 유명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손쉬운 표적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담마카야사원 포위작전 실패 이후 지난해 3월, 태국 군사정부는 불교 승단 위원회의 권한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직 의회 제출 전이지만 이번 체포 사태로 인하여 새로운 법안 통과를 위한 기초가 놓여질 수 있다.

- 군사 쿠데타 이전 이미 승려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절도와 문서 위조, 2013-2014년 시위 중 공무원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까지 방콕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붓다 이사라의 체포는 가장 예상 밖의 경우일 것이다.
- 이사라는 사실 불교 개혁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으며 지난 해 8월에는 군사정부가 불교사원 부패 근절이라는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사라는 '정부가 아직도 부패를 척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반대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물으며 불교 승려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 이사라의 체포는 군사정부에서 그의 정치적 돌발행동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나 지난해 즉위한 태국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에게 정권의 도덕성과 정권 유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 최근 태국에서는 반정부 시위 및 집회가 유례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교 승려들의 체포는 특히 아직도 친탁신 레드셔츠 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승려들에게 정치적으로 군사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강력한 사전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승려들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승려들이 체포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기사 : Thailand's junta renews corruption crackdown on Buddhist monks (The Guardian, June. 25, 2018)

베트남 부정부패 단속 강화로 고위 공직자 50명 징계 조치

(Vn Express International, 2018.6.26)

- ‘공산당 체제 및 국가 기구의 기강 강화를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부패 척결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 인기 정치인 및 은퇴한 정치 지도자 등과 현직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총 50명이 부정부패와 재정 낭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당 관계자가 월요일 밝혔다.
- 당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자 부패방지 중앙조정위원회의 부대표인 판 딘 짝 (Phan Dinh Trac)은 2016년 1월 제 12차 전국 당대표 회의 개시일로부터 계속된 전방위 부정부패 단속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월요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공직자 중 9명은 당 중앙위원회의 현직 혹은 전직 위원이라고 말했다.
- 판 딘 짝 사무총장은 또한 베트남의 반부패 노력이 전·현직 고위 공직자의 징계 조치를 포함하여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 떠오르는 스타 정치인이었던 딘 라 땅(Dinh La Thang)이 당에서 축출되었다. 딘 라 땅은 국영 거대 석유기업 페트로베트남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경제운용법 위반죄로 1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또한 3,5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관련 경제운용법 위반으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 판 딘 짝 사무총장은 ‘공산당 체제 및 국가 기구의 기강 강화를 목표로 하는 광범위 부패 척결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평했다.
- 기타 다수의 부정부패 및 경제 운용법 위반 사건이 전국민적 관심을 끌게 되면서 공산당 규정 및 국법에 의거하여 해결되고 있다.
- 적발 및 징역형이 선고된 고위 공직자의 수 측면에서 에너지 및 금융 부문이 반부패 노력의 중심에 있어 왔다.
- 판 딘 짝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단속의 성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체제 전반을 정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부패방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응우옌 푸 쯙 당 총서기 (74세)는 베트남의 반부패 노력이 현재 최고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베트남 당국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부패 노력을 지속시켜 주기를 촉구했다.

※ 원문기사 : 50 high-profile officials disciplined in Vietnam's escalating corruption crackdown (Vn Express International, June. 26, 2018)

말레이시아 1MDB 스캔들: 신임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 '나집 라작 전 총리 곧 구속될 것' (Newsweek, 2018.6.29)

-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총리는 목요일 자신의 전임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가 공공개발자금 수십억 달러 횡령 혐의에 대하여 법정에 설 충분한 증거가 수집 되는대로 곧 구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집 전 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지난 10년간의 총리직에 연이어 3선에 성공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찬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신임 총리의 이번 발표는 나집 실각을 상징하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채널뉴스아시아가 보도했다.
- 치솟는 물가와 나집을 둘러싼 수많은 부패 혐의들에 지친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지난 5월 9일 치러진 선거에서 나집의 통일말레이국민조직 (UNMO)을 축출하기 위하여 나집을 실각시켰다는 사실 역시 몹시 놀라운 일이었다.
- 신임 마하티르 총리는 선거유세 기간 동안 나집을 '도둑'이라 불렀으며 92세의 나이로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출직 국가지도자가 되었다. 이후 마하티르 신임 총리가 나집이 연루된 부패 사건 조사를 신속히 재개하면서 나집은 본격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숨겨진 자산과 현금, 터무니없는 과잉지출과 밝혀질수록 점점 더 수상쩍어지는 거래들이 밝혀지면서 나집의 혐의 목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의 몇몇 외국 정부까지 각자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초점은 나집 전 총리가 2009년에 세운 국영 투자펀드 1MDB(1Malaysia Development Berhad)로부터 나집 자신과 관련자들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이다.
- 현재 국내 사건 수사 결과는 나집 전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스트레이트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나집 전 총리의 측근인 42세의 아마리 에펜디 나자루딘(Amhari Efendi Nazaruddin)이 지난 월요일

구속되었다. 목요일에는 나집이 소속된 통일말레이국민조직의 계좌가 동결되었다. 같은 날 모하티르 총리는 ‘이번 판에서 지지 않을’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제는 언제라도 나집을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나집과 그의 아내 로스마 만소르(Rosmah Mansor)가 충격적일 정도의 탐욕으로 모아들인 물건들이 떠들썩하게 압수되면서 부부는 전 국민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수요일 나집 전 총리 부부와 관련된 부동산에서 2억7천3백만 달러 상당의 보석과 가방, 시계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 아마르 싱(Amar Singh) 경찰국장은 압수수색에서 목걸이 1,400개, 가방 567개, 시계 23개, 반지 2,200개, 브로치 1,600개와 티아라 14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 중 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목걸이 하나만 해도 160만 달러 상당이었는데, 말레이시아인의 월 임금 중간값은 약 550달러 가량이다.
- 압수된 에르메스 핸드백만 해도 1,270만 달러 상당이었고 롤렉스, 리차드 밀레, 쇼파드 등의 시계도 1,900만 달러 상당이었다. 카르티에, 베르사체, 디올 등의 명품 선글라스 274점도 압수되었다고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신이 보도했다.
- 나집은 압수품이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
- 스트레이츠타임즈지에 따르면 나집 전 총리는 ‘물건들의 대부분이 지난 수 십년간 선물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선물한 사람들이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집은 또한 ‘지난 수 십년에 걸쳐서 선물로 받아온 물건들이기 때문에 현 시가 기준 소매가로 가치를 산정하면 지나치게 금액이 부풀려져 상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 지난 5월에는 2,90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이 발견되면서 22명의 은행 직원이 이를 세는 데 이틀이 걸린 바 있다. 문제의 현금은 26개국 화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로 말레이시아 링깃, 미 달러, 싱가포르 달러였다.
- 나집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MBD의 거래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 그러나 마하티르 총리는 문제의 국영펀드와 관련된 문서에 나집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고 반론했다.
- 마하티르 총리는 말레이메일에 ‘언제 서명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1차 차입금 420억 링깃(105억 달러)의 들어오고 나간 모든 돈에 나집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언제 서명했는지 모른다면 그건 나집이 서명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에 위치한 여론조사기관 메르데카센터의 이브라힘 수피안(Ibrahim Suffian) 소장은 ‘나집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믿을 수 없어하고 몹시 분노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한다.
-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횡령 자금은 요트, 그림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특이한 점은 나집의 양아들인 영화 프로듀서 리자 아지즈(Riza Aziz)를 통하여 할리우드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제작에도 흘러 들어갔다는 점이다. 2,700만달러 이상은 나집의 아내를 위하여 희귀한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 나집을 축출시킨 말레이시아 유권자들의 반응은 놀랍다기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쪽이었다. 나집을 기소하고자 하는 또 다른 국가인 싱가포르에 위치한 S.라자라트람 국제문제연구원의 라샤드 알리(Rashaad Ali) 연구원은 뉴스위크지에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나집 전 총리와 그 아내의 사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 알리 연구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들은 나집 전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적어도 나집 부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집에게서 압수된 사치품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그 사실 자체에 놀랐다가보다는 그 엄청난 규모에 놀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 미국 검찰에 따르면 45억 달러 상당이 복잡한 거래나 유령회사를 통하여 돈세탁되었으며, 1MDB에서 횡령한 자금의 일부는 '말레이시아 공무원 1번'이라 불리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라자크의 개인 계좌로 6억8천1백만원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모하메드 아판디 알리(Mohamed Apandi Ali)는 문제의 자금이 사우디 왕가로부터의 기부금이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나집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미국 검찰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보다는 말레이시아에서 나집을 기소하는 편이 나으며 현 토미 토마스 법무장관이 증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나집은 순순히 압박에 굴하지 않고 미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나집은 자신에 대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나집은 '나는 1MDB로부터 이익을 본 것이 없다. 1MDB는 국익을 위해 창설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금 유용 문제가 있을 것을 알았다더라면 내가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싱가포르 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제거 반 데 발(Zeger van der Wal) 부교수는 나집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말했다.
- 발 교수는 뉴스위크지에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조사 진행이 탄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나집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측근과 기업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 '수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나집이 결국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형이나 약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는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 과정이 진행되느냐인데, 신임 총리와 그 세력이 그러한 목표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나집 부부가 낚은 수법으로 상황을 타개하려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선거 결과 나집의 패배가 확정되자마자 나집 총리 부부는 자카르타 방문 계획을 세웠지만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는 부부의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 라샤드 알리 연구원은 뉴스위크지에 ‘나집이 또 다른 구실로 출국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과 말레이시아 국민 모두가 나집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집이 어떤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알리 연구원은 또한 나집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후 돌아간 파항의 폐칸 지역 유권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높다고 덧붙였다.
- ‘나집은 여전히 여론으로부터 차단된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듯 보이는데, 바로 그 여론이 실각의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알리 연구원은 덧붙였다.

※ 원문기사 : Malaysia's 1MDB scandal: EX-PM Najib Razak faces arrest soon, says successor Mahathir Mohamad (Newsweek, June. 29, 2018)

2 국제회의 동향

1 2018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4.29.(일) ~ 5.5.(토) / 미국, 캐나다
- 출장자 : 위원장, 국제교류담당관, 담당 사무관, 에디터

2. 주요 성과

- 옴부즈만 국제 협력활동에 주도적·전략적 참여
 - (다자협력) 아시아 지역이사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 멤버로서 IOI 발전을 위한 정책논의 및 주요 의사결정에 주도적 참여
 - (양자협력) 작년 12월 만료된 한-태국 옴부즈만 MOU 재연장을 통한 재외국민 권익보호·증진 기반 공고화
- 위원회 홍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 전문가 제안 청취
 - (옴부즈만) 주요 민원을 소개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을 통한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의 홍보 경험 공유
 - (부패방지) 국제관계 전문가인 재외공관장들로부터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아이디어 청취
- 국제사회 반부패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전략방안 확인
 - 국제 반부패 전문가(UNDP)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높은 평가 확보 및 지원 대상 개도국 확대 가능성 확인
 -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주요 선진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국제 반부패 논의를 주도하는 행사임을 재확인

2 2018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 6. 27.(수) ~ 6. 28.(목) / 프랑스 파리
-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아르헨티나, 프랑스)
- 참석자 : G20 회원국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FATF 등 국제기구 대표 및 CARICOM, EU 등 지역 기구 대표
- ※ 우리측: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법무부 검사

2. 회의 주요 결과

- '공기업 청렴성 제고' 및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고위급 원칙을 중점으로 논의하였으며, 국가별 입장을 종합한 수정안을 도출, 10월 제3차 회의 전까지 서면을 통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함
- UNODC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부패와 성(性)에 대한 연구' 및 '스포츠 분야 부패에 대한 연구'가 공유되었음
- '19-'21 반부패 실무그룹 행동계획 초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동의를 표했으며, 이에 따라 몇 개의 우선 순위 주제를 선정하여 간결하고 필수적 내용만을 담은 문서로 재구성하는 것에 합의함

3. 대표단 활동

- '이해충돌방지' 및 '공기업 청렴성 제고'에 대한 고위급 원칙 논의에 적극 참여함
- 'G20 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 질문지' 미응답 국가에 대하여 회신을 독려하여 금년 중 자료집을 출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컨셉노트 작성 과정에 지난 4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자료로 제공함
- '19-'21 반부패 행동계획에 대하여 국내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입장을 의장국에 제출할 예정

3 옴부즈만 소식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옴부즈만, 정부에 소득·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전화민원 서비스 개선 촉구

※ 출처: CANADA ‘British Columbia Ombudsperson urges government to improve telephone service for income and disability assistance recipients’ (IOI 홈페이지>News, 4.18.2018)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옴부즈만 제이 초크(Jay Chalke)는 40번째 보고서인 ‘고질적 문제: 소득·장애수당 문의 통화 대기시간’을 2018년 4월 17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개발·빈곤경감부의 중앙집중식 전화 민원처리 제도와 소득 및 장애 수당 민원신청인 및 수급자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옴부즈만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제이 초크 브리티시 컬럼비아 옴부즈만은 ‘사회개발부의 전화민원 서비스는 지난 수년 간 느린 것으로 유명했다. 소득이나 장애 수당 신청자들 중에는 우리 주에서 가장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사회개발부는 이 서비스를 제 때에 제공하고 시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은 소득 수당 및 장애 수당 수급자들이 사회개발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겪는 긴 통화대기 시간, 통화 끊김, 통화시간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2017년 7월 시작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9개의 권고안이 사회개발·빈곤경감부에 주어졌다. 사회개발부는 9개의 권고안 중 6개를 전면 수용하고 나머지 3개는 부분 수용했다. 사회개발부는 그 이유를 설명한 서한을 옴부즈만에 발송했으며 이는 보고서에 부록으로 실렸다.
- 초크 옴부즈만은 ‘통화대기시간을 공개하라는 옴부즈만의 권고를 사회개발부에서 수용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통화대기시간이 공개되면 사회개발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이용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문제 해결 진전 상황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통화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서비스 품질만 낮춘 제한 서비스 기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사회개발부의 결정도 환영한다. 그러나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적기 서비스 기준 대신 다른 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 전반적으로는 사회개발부의 약속들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옴부즈만실은 사회개발부의 서비스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권고안과 보고서의 실행 경과를 공개할 것이다.

□ 체코: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사회보장 관련 민원 증가

※ 출처: CZECH REPUBLIC ‘Ombudsman increasingly dealing with social security problems’
(IOI 홈페이지>News, 4.19.2018)

- 2017년 한 해 동안 총 8,191 건의 민원이 체코 옴부즈만에 접수되었다. 사회보장 관련 문제들에 대해 옴부즈만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고용·노동 관련 민원도 39% 증가했다.
- 옴부즈만실에서 해결한 민원은 8,266건으로, 그 중 40 건은 어린이가 제기한 민원이었다. 착오 혹은 차별이 확인된 576 민원 건 중 528 건에 대하여 옴부즈만이 해결책을 확보했다.
- 옴부즈만이 해결한 사회보장 관련 민원 수는 1,500 건에 달한다.
- 안나 아바토타(Anna Abatova) 옴부즈만은 ‘지난 3년간 사회보장 관련 민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사회보장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의 수는 전년 대비 100명 늘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 관련 민원은 주로 의료비 자기부담금, 장애 수당, 질병 보험 및 연금과 관련되어 있다.
- 지난 해 옴부즈만실은 또한 건설 및 지역개발 관련 600개의 민원을 조사했으며 그 외에 군·경·교정행정 관련 500개의 민원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 옴부즈만은 또한 22개의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를 벌였다. 장기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이들 시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충분한 개별 관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환자의 존엄성과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자의 이동 제한이나 통증 모니터링, 영양 제공 등도 같은 상황이었다.
- 옴부즈만은 5개의 법령 권고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옴부즈만 활동으로 밝혀진 가장 심각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 하원에 제출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 현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에 주거용 주택의 주거용 세대도 포함할 것
 - ▲ 체코 국민과 외국인이 행정기관에 연락하기 위하여 특수등기소에서 발급 받은 등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할 것

- ▲ 행정 상 성별 변경을 위하여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폐지할 것
- ▲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특정 의료 서비스 비용 변제 행정 절차를 개정할 것. 현재 상태로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음
- ▲ 사회보장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이용자의 존엄성, 사생활, 안전, 성실에 있어서의 어떠한 침해이든 그것이 위법에 해당하도록 할 것

□ IOI: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개최

※ 출처: IOI 'IOI Board Meeting held in Toronto, Ontario' (IOI 홈페이지>News, 5.8.2018)



-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연례 이사회의가 2018년 5월 1일부터 4일까지 40년 전 협회가 창설되었던 곳을 기리는 의미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옴부즈만협회 북미지역 지역 대표이자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폴 듀브 (Paul Dube)와 온타리오 옴부즈만실에서 행사를 주최했다.
- 6개 지역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협회 현황과 과거 성과 및 미래 발전방향과 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아프리카와 APOR, 캐리비안해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11개국의 신규 가입 승인되었다. 이들 중 3개국은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만장일치로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성공적인 사업 중 하나였던 지역보조금 사업을 2018/2019년도 회원국에 대하여 재개하기로 결정되었다. 더불어, 회원국들이 각각의 사업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한 요청을 사무국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공식 발표할 것이다.
- 회의의 또 다른 안건은 2018/2019년도 신규 교육 사업이었으며 전략 계획 실행의 1차 검토 및 신규 조례 개정에 대한 첫 번째 논의도 이루어졌다.
- 이번 이사회의에 뒤이어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서는 '정의를 위한 임무: 세계옴부즈만협회 1978-2018'의 출간을 기념하고 UN의 아젠다 2030을 위한 UN-세계옴부즈만협회 사이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 영국: 옴부즈만 조사 결과 암환자의 고통스러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 출처: UK ‘Ombudsman finds Grandmother’s painful death from cancer was avoidable’
(IOI 홈페이지>News, 5.23.2018)

- 의회·보건서비스 옴부즈만(PHS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광암으로 사망한 73세 여성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병원에서 진단을 9개월이나 미루면서 결국 사망했다. 지역 당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환자의 아들이 의회·보건서비스 옴부즈만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인의 모친은 2015년 2월 방광암 의심 증상으로 주치의로부터 국립 바킹·하버링·레드브릿지 대학병원 산하로 굿메이스에 위치한 킹조지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 이후 몇 번이나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그 결과 분명한 방광암 소견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 병원 측에서 환자에 대한 관찰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면 2015년 3월에 종양이 더 작은 상태에서 암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화학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환자의 생존 확률은 70%에 가까웠을 것이다.
- 그러나 환자는 제 때에 진단을 받지 못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신부전을 겪어야 했고 결국 2016년 5월 사망했다.
- 환자 아들의 민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에서 병원 측은 제대로 된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받았더라면 환자가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또한 환자의 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이러한 실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 의회·보건서비스 옴부즈만 롭 베렌스(Rob Behrens)는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의사와 간호사들이 매일매일 수백 수천의 환자들을 돌보느라 고생한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이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서비스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환자 사망 건에 대한 국민건강서비스의 조사가 미흡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 '이번 사건은 또한 국민의료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변화와 개선을 위하여 민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킹조지 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실책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서한을 환자 아들과 그 형제·자매들에게 보냈다. 병원 측은 서한에서 또한 같은 실수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개선책을 시행했는지를 설명했다.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병원 측은 어머니가 충분한 검사를 받고 제 때에 진단을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00파운드를 유가족에게 지급했다. 유가족은 이 돈을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몇 주 동안 보살핌을 받았던 세인트 프란시스 호스피스 병원의 롬포드 지부에 기부했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와 아제르바이잔 옴부즈만 사이 협력으로 비극적 사건 해결**

※ 출처: AUSTRIA ‘Cooperation between Austrian and Azerbaijani Ombudsman contributes to solution in tragic case’ (IOI 홈페이지>News, 5.25.2018)

- 2015년 바쿠에서 열린 제 1차 유럽 올림픽 대회 도중 올림픽 선수촌에서 오스트리아 선수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군터 크라우터(Gunther Krauter) 박사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인권위원장 엘미라 술레이마노바(Elmira Suleymanova) 교수의 성공적 국제 협력에 부분적으로 힘입어 마침내 해결되었다. 양국 옴부즈만 사이의 지속적인 연락 및 양국 대표단의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오스트리아 선수는 지난 주 마침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 유럽올림픽에 참가했던 이 젊은 오스트리아 선수는 공식 셔틀버스 탑승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고, 현재는 하반신 마비 상태로 휠체어 신세가 되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당시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아제르바이잔 정부 대표단은 사고 선수와 가족에게 상당 금액의 보상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협상에는 2년 이상이 걸렸다.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군터 크라우터는 2017년 12월 해당 사건에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아제르바이잔 옴부즈만인 엘미라 술레이마노바에게 연락을 취했다. 양 옴부즈만은 올해 2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회의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크라우터 옴부즈만이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위원회의 TV 프로그램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은 미디어의 더 큰 관심을 끌게 되었고 마침내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이 나서게 되었다. 옴부즈만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지난 주 오스트리아 선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 영국: 시 당국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숙인 가족 방치

※ 출처: UK ‘Homeless family left in crowded conditions while council delayed making decision’
(IOI 홈페이지>News, 6.11.2018)

- 일링(Ealing)시 당국이 노숙인 신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너무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바람에 집 없이 생활 하던 한 여성과 5명의 자녀가 곰팡이가 가득한 비좁은 방에 방치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지방정부·사회복지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 당국에서 결정을 미루면서 노숙인 가족은 비좁은 방에 6개월 머문 후 3개월을 더 지내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한 시 당국에서 이들을 해당 시설에 단기적으로 머물게 한 것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더 나은 시설을 계속해서 찾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 옴부즈만은 런던자치구 일링 시가 적합한 거주 시설 수요 충족을 위한 검토에 기울인 노력을 인정했으나 현재 부적절한 시설에 수용된 노숙인들에게 권리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 지방정부·사회복지 옴부즈만 마이클 킹은 ‘시 당국은 노숙인 가족의 필요에 적합한 시설에 이들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링 시가 촉박하게 노숙인 대가족에게 알맞은 시설을 찾기 어려웠던 점은 이해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당국에서 더 적합한 시설을 계속해서 찾았어야 했다. 그 가족은 수리가 시급한 비좁은 방에 방치되었다. 열악한 시설에 방치된 노숙인 가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올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 당국에서 옴부즈만의 권고안 대부분을 수용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만 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슷한 문제들도 인지하고 다른 권고안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해당 건의 노숙인 가족은 집을 잃은 후 단독 주방과 욕실이 있는 해당 시설에 수용되었다. 시 당국에서는 이 가족에게 침실 세 개가 딸린 숙박시설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 여성은 가족이 수용된 시설의 적절성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했다. 문제의 시설이 비싸고 안전하지 않으며, 전 남편의 거주지에는 너무 가깝고 자신의 어머니나 아이들의 학교와는 너무 멀었다는 것이다. 방이 3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임신 중 골반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고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시 당국에 방이 습하고 곰팡이 투성이었으며 식기건조기에 물이 새고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 당국은 문제의 시설이 비좁지 않다고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만은 또한 시설의 과다 사용료에 대하여 당국을 비판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시설 이용료로 매 주 40파운드를 낼 수 있는 여력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주당 수백 파운드의 이용료가 청구되면서 시설을 나갈 때 5,000파운드의 미납금이 발생했다. 이 미납금은 현재 면제된 상태이다.
- 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가족이 의도적으로 집을 나온 것으로 밝혀졌고, 따라서 시 당국에서 이들에게 집을 제공해 줄 의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당국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가족에게 필요 이상으로 길게 숙박을 제공한 것이다.
- 지방정부·사회복지 옴부즈만의 역할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공공 성인복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 경우에는 시 당국에서 여성에게 사과하고 여성과 가족이 열악한 시설에 머문 기간 5개월에 대하여 1개월 당 300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숙박 지원 신청 처리기간이 지연된 것과 그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100 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 옴부즈만은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하여 시 당국의 절차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번 경우에는 생활에 적합하고 이용료가 적절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일링 시 당국의 진행상황을 검토했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했다. 또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집 없는 사람들과 이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 배치된 재원을 검토했다.
- 옴부즈만은 또한 일링 시 당국에 현재 부적합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숙인들을 확인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할 권리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 시 당국은 비좁은 임시거주시설에

수용된 모든 가구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겠지만, 해당 권고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과잉수용의 문제 이외에도 적합성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링시 당국은 부적절한 시설인 줄 알면서도 노숙인을 그곳에 배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나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에